

(엠바고) 2016.12.29. 08:00

※ 경제관계장관회의(12.29일)
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7년 경제정책방향

2016. 12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2016년 경제운용 평가	1
II. 향후 경제여건	2
III.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	7
IV. 2017년 경제정책 과제	8
1. 경기·리스크 관리	8
2. 민생 안정	19
3. 구조개혁과 미래대비	31
V. 경제전망	40

I. 2016년 경제운용 평가

◇ 어려운 여건에서도 완만한 회복세 지속, 최근 불확실성 확대

□ (경기) 연초 소비절벽, 중국발 대외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,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 완만한 회복세 지속

○ 다만, 9월 이후 파업, 프리미엄폰 단종, 청탁금지법 시행, 정국 불안 등 하방요인들이 증첩되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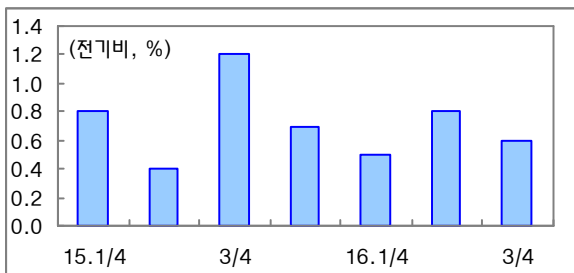
□ (고용) 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어 30만명 수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,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은 다소 악화*

* 자영업자 증감(천명) : ('15)△89 ('16.1/4)△96 (2/4)△68 (3/4)52 (10~11)13.3

○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기반 약화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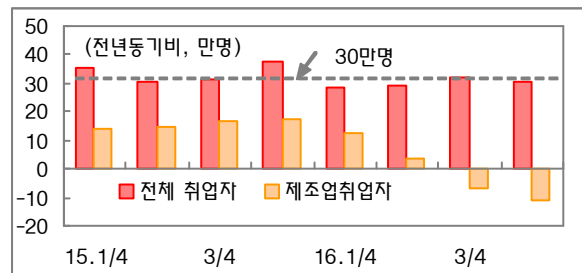
* 1분위 소득(전년동기비, %) : ('15)4.9 ('16.1/4)△2.9 (2/4)△6.0 (3/4)△5.9

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



* 자료 : 한국은행

취업자 증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, '16.4/4는 10~11월 평균

◇ 산업경쟁력·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

□ (경쟁력) 원칙에 입각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등 산업·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

○ 세제·예산·금융 집중지원 등 신산업 육성 노력도 가속화

□ (저출산) 「3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15.12)」 틀 아래 고용·주거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근본적 대응 추진

○ 다만, 가시적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흡한 상황

* 합계출산율(명) : ('05) 1.08 → ('12) 1.30 → ('14) 1.21 → ('15) 1.24 → ('16.上) 1.22

II. 향후 경제여건

1 대외경제 여건

① 세계경제는 당분간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

- 세계경제는 미국·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지만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

* 세계경제성장률(IMF, %) : ('00~'07 평균) 4.5 ('12~'15 평균) 3.4 ('16) 3.1 ('17^e) 3.4

- 미국은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, 브라질·러시아 등은 유가회복, 정치불안 완화 등으로 성장률 반등
- 다만, 일본·EU는 '16년 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겠으며,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라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

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(IMF, '16.10월, %)

	세계	선진국	미국	유로	일본	신흥국	중국	브라질	러시아
'16년	3.1	1.6	1.6	1.7	0.5	4.2	6.6	△3.3	△0.8
'17년	3.4	1.8	2.2	1.5	0.6	4.6	6.2	0.5	1.1

②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국제유가 점진적 회복 예상

- 美 추가 금리인상, 美 트럼프 정부의 공약* 이행 정도 및 효과, 英 브렉시트 가능성 등 선진국發 변동성 확대 예상

* 주요공약 : 감세.재정지출 확대(인프라투자 1조불), 보호무역주의 강화

- 美 금리인상 이후 취약 신흥국의 자본유출·경제불안 가능성, 중국의 기업부채 증가·부동산 과열 등 불안요인도 잠재
- 국제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, OPEC 감산합의 등에 힘입어 50\$/B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, 달러화 강세 등 하방 요인도 상존

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B, 기간평균)

기관 (전망시점)	유종	'16년		'17년				
		연간	4/4	1/4	2/4	3/4	4/4	
에경연('16.11월)	Dubai	41	47	52	48	51	53	54
CERA('16.11월)	Dubai	41	48	49	47	49	51	50
EIA('16.12월)	Brent	43	48	52	50	50	52	55

① (경 기)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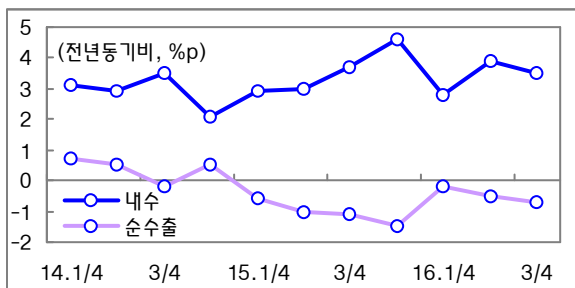
-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간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

*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회복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 2달 연속 하락

- 특히, 유가 상승, 가계부채 상환부담, 구조조정 영향,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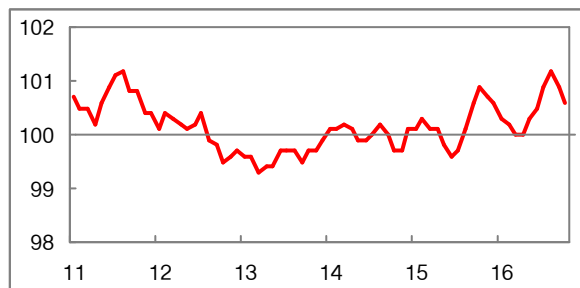
- 다만 노후차 개소세 감면·신산업 육성세제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, 구조개혁 등 효과는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

내수-순수출 성장 기여도 추이



* 자료 : 한국은행

경기동행지수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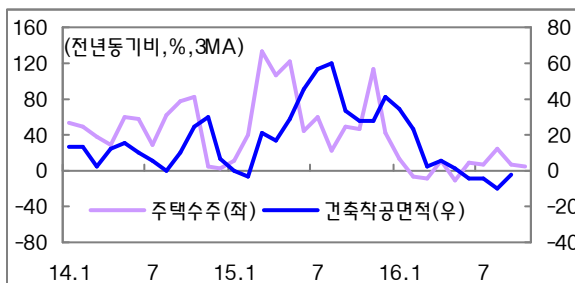
② (내 수) 민간소비·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 둔화

- 내수는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, 내구재 소비 둔화, 주택시장 활력 약화 등으로 소비·건설투자 중심으로 둔화 예상

* 내구재 판매(전년비,%) : ('15) 10.2 ('16.上) 8.4 (3/4) 1.3 (10월) 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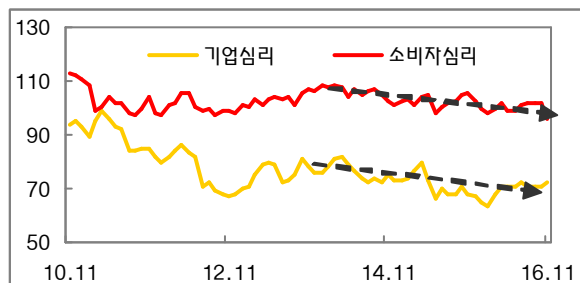
-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주체 심리위축도 추가적 제약요인

건축착공면적·주택수주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소비-기업 심리 추이



* 자료 : 한국은행

③ [수출입] 증가전환이 예상되며, 경상수지 흑자폭은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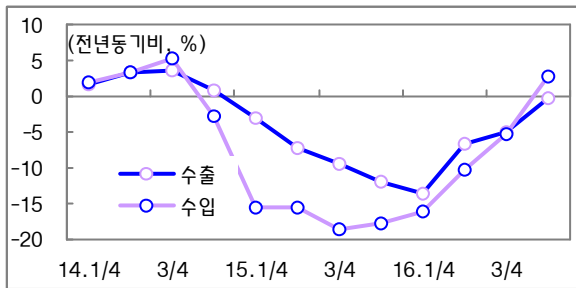
□ 수출 증가율(통관)은 유가회복 등으로 3년만에 증가세 전환 예상

○ 세계교역량은 소폭 개선되겠으나, 日·中 등과 경쟁격화, 해외 생산 확대,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물량 회복세는 미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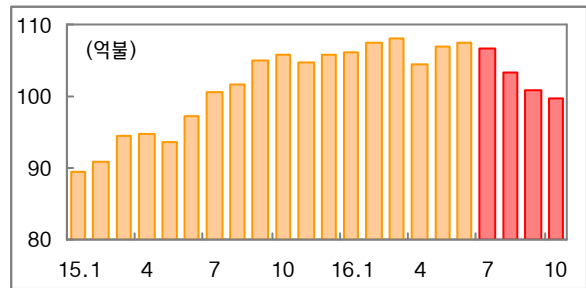
* 세계 수입규제 부과건수(WTO) : ('12)136 ('13)182 ('14)182 ('15)210

□ 경상수지는 유가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, 건설·여행·운수 등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흑자폭 감소 예상

수출입 증가율 추이(통관기준)



12개월 이동 누적 경상수지 추이



* 자료 : 관세청, '16.4/4분기는 10~11월 평균

* 자료 : 한국은행

④ [고 용]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되나 고용창출력은 둔화

□ 청년·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, 일자리 예산 확대(+1.3조원)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취업자 증가·고용률 상승세는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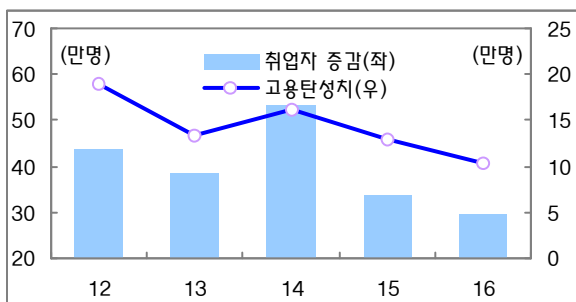
* 일자리 예산안(조원) : ('16)15.8→('17)17.1, 직접 일자리(만개) : ('16)73.3→('17)76.4

□ 다만, 구조조정 영향, 내수둔화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우려

○ 기업 구조조정,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인력감축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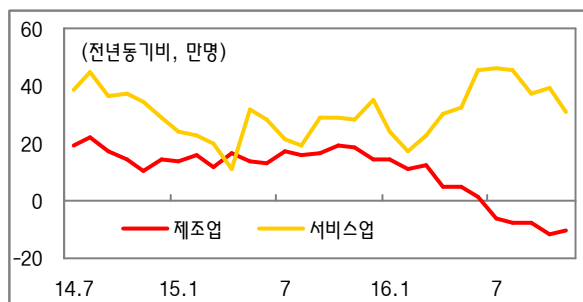
○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, 한계 자영업자 증가,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은 부담요인

고용탄성치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 ** '16년은 1/4~3/4 평균

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

5 (물가·부동산) 완만한 물가 상승, 주택가격은 안정세 지속

- 소비자물가는 유가하락 효과 소멸* 등 공급측 하방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완만한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

* 두바이유 전망(\$/b) : ('15) 51 ('16^e) 41 [전년비 △19.6%] ('17^e) 51 [+24.4%]

- 주택시장은 11.3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며, 美 금리인상,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활력 약화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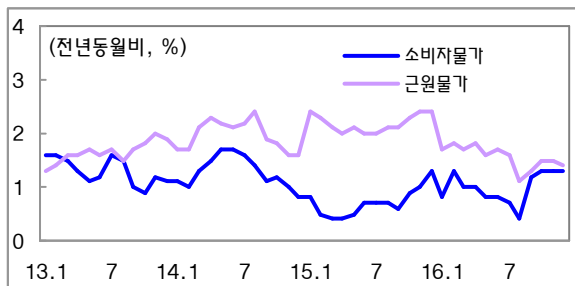
* '16.1~11월 주택가격(전기비,%) : (전국) 0.65 (수도권) 1.24 (지방) 0.11

강남4구 아파트가격(전월비,%) : ('16.1)△0.1 (8)0.5 (9)0.6 (10)1.1 (11)0.5

-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*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, 월세가격은 전세→월세전환 지속으로 안정세 지속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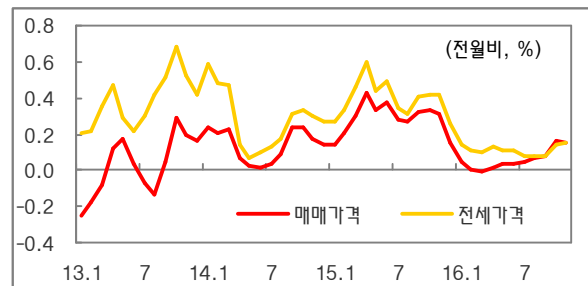
* 준공물량(주산研, 만호) : ('15) 46.0 → ('16^e) 54.5 → ('17^e) 60.6

소비자물가



* 자료: 통계청

주택 매매·전세가격



* 자료: 한국감정원

6 (리스크) 미국發 대외 불확실성 확대, 내부 취약요인도 부담

- 美 금리인상 가속화*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 中 기업부채**·신흥국 불안 등 결합시 실물·금융리스크 확산 우려

* '16.12월 FOMC에서 '17년중 금리인상 횟수 전망 상향 조정(2→3차례)

** 중국 기업부채(GDP대비, %) : ('10) 122 ('12) 132 ('14) 152 ('16) 169

- 美 新정부(1.20일 출범)의 통상 기조 전환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도 부담 요인

- 국내경제도 美 금리인상·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 변화와 맞물릴 경우 부동산 시장 둔화, 한계 가계·기업 리스크 확대 가능성

3 구조적 여건

1 [산업]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 대응도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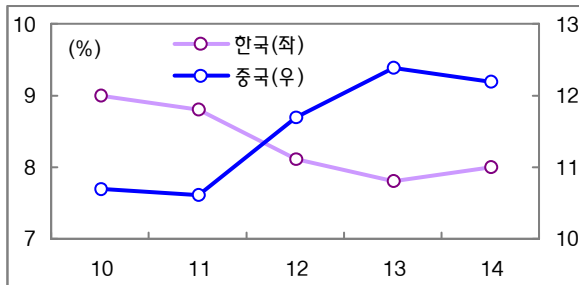
□ 글로벌 공급 과잉, 후발국 추격 등으로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며 생산·수출 등이 구조적으로 둔화될 우려

* 세계교역량 증가율(% , WTO) : ('13)3.5 ('14)3.8 ('15)2.7 ('16)1.7 ('17)1.8~3.1

□ 신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가운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경제의 적응도는 낮은 편

○ 특히, 시장효율성·노동·법질서 등 기초 분야의 적응력 개선 시급

韓 10대 수출품목('10)의 세계 시장점유율



* 출처: UN Comtrade, HS code 4단위 기준

4차 산업혁명 적응도

(순위)	종합	노동	기술	법질서 ¹⁾
스위스	1	1	4	6.75
미국	5	4	6	23.0
일본	12	21	21	18.0
독일	13	28	17	18.75
대만	16	22	14	31.25
한국	25	83	23	62.25

* 출처: UBS 1, 재산권, 기업윤리, 등 4가지 순위 평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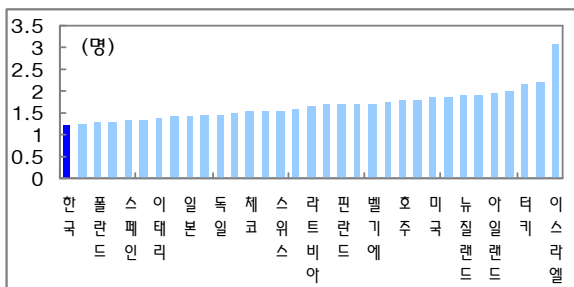
2 [인구]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적극적 준비 미흡

□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·혼인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, '18년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 속도도 가속화

* 혼인율/출생아수(1000명당 건수/만명) : ('11)6.6/47.1 ('13)6.4/43.6 ('15)5.9/4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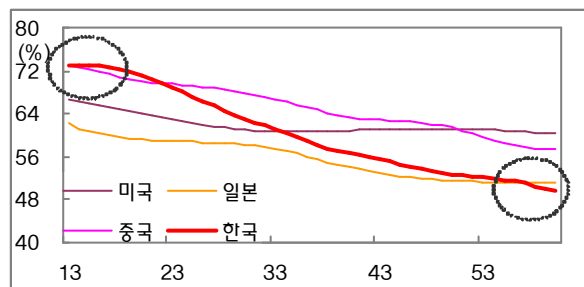
○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며 총인구중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경쟁국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 둔화 우려

OECD 합계출산율('14년)



* 출처: OECD

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



* 출처: OECD

Ⅲ.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

◇ 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②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③ 4차 산업혁명·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

- ① **[경기·리스크 관리]** 성장·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
- ② **[민생안정]**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·민생안정에 집중하고 부문간 상생 노력 강화
- ③ **[구조개혁과 미래대비]** 4차 산업혁명, 저출산·고령화 등 경제·사회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 완수

3대 분야·9대 중점 추진과제



IV. 2017년 경제정책 과제

1 경기·리스크관리

【적극적 거시정책】

-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**20조원** 이상 경기보장
 -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**1/4분기** 역대 최고 수준(계획기준) 조기집행 추진

【부문별 활력 제고】

- (투자)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시 확대(2%p),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**85조원** 공급 등 세제·금융 집중 지원
 - 중소·중견기업 에너지고효율 설비도입 지원,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등 친환경 투자 확대
 - 내진보강 강화, 민자사업 활성화 등 **SOC**투자 촉진
- (소비)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을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유도 및 농축수산물 등 소비 촉진
- (수출) 무역금융 **8조원** 확대 및 균형있는 對美 교역구조 형성을 추진하고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

【리스크 관리 강화】

- (외환·금융)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준비 및 中企 금융지원 확대 등 시장 안정 노력 강화
- (구조조정) 조선·해운 외에 건설업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'**Pre-Packaged Plan**' 활성화 등 추진체계 정비
- (가계부채)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화하고 질적구조 개선을 **2금융권**으로 확산, 서민금융 확대로 서민·한계차주 부담 경감
- (부동산)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여건에 대한 탄력적·맞춤형 대응체계 구축, 매입·전세임대 확대 등 시장안전판 강화

(1) 적극적 거시정책

◇ 재정·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, 총 20조원 이상 경기보강

- 1 [재정정책]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, 역대 최고수준(계획기준) 1/4분기 조기집행
 - ① (중앙) '16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·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(4.10일)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
 -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연간 재정집행률을 1%p(3조원) 제고*하고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0.3조원 증액
 - * 연간 재정집행률(%) : (최근 5년평균) 95.5 → ('17년) 96.5
 -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(3.5조원), 예타 선정기간 단축(3→1개월), 선금 지급한도 상향(70→80%) 등을 통해 1/4분기 31% 조기집행
 - * 1/4분기 집행률 목표(%) : ('14)28.0 ('15)29.0 ('16)31.0 ('17)31.0
 - ② (지방) 1/4분기 조기집행(26%)을 추진하고 추경 확대 독려
 - * 1/4분기 집행률 목표(% '16→'17년) : (지자체)25.0→26.0 (지방교육)25.1→26.0
 - ③ (공공기관) 필수 공공서비스·신산업 중심으로 7조원 투자 확대
 - * 공공임대주택, 뉴스테이, 송배전, 신재생에너지, 원전 내진보강 등
- 2 [정책금융] 산·기은, 신·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확대하고 1/4분기 조기집행(25%)*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
- * 정책자금 공급계획('16→'17년) : 179→187조원, 1/4분기 집행률 : 23→25%
- 3 [통화정책]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
 -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심화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
 - 국내외 금융·경제상황,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
- 4 [외환정책]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

(2) 부문별 활력제고

◇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

- ① (투자 인센티브 확대) 세제·금융 지원 확대로 투자의욕 고취
- ①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%p 상향(대기업은 1%p)하여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를 유도
 -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연장*(‘16.上→’17.上)하고,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
 - * 전년대비 투자가 증가한 경우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최대 50% 가감 조정 허용
 - ②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*(1월~)하고 정책금융 집중 공급(‘16년 80 → ’17년 85조원)
 - * 11개 신산업 분야에 R&D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(최대 30%),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(5~10%) 등
 - ③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
 - * (현행) 비수도권 복귀에 한정, 부분복귀시에는 중소기업 한정
 - (변경)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 포함, 부분복귀시 중견기업 포함
- ② (친환경 투자 촉진)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,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친환경 투자 지원 확대
- ① (에너지 절약 투자) 한전이 시행하는 중소·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대폭 확대(‘16년 178 → ’17년 500억원)
 -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및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융자 등 확대(1.6→1.9조원, 전력산업기반기금)
 - 학교 옥상,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(‘16년 2천억원→ ’17년 4천억원, 한전·발전자회사)
 - 고속도로 구간 가로등·터널등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거쳐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추진(예 : 한전 ESCO사업 등 활용)

② (전기차 인프라)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(12,900개, 1.1천억원)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한시 감면 등 전기차 보급 확산 지원

- '17년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주요 휴게소는 추가 설치(200기)
- 공공주택, 쇼핑몰,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내 주요거점에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(12,700기)

③ (배출권 인센티브)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- 친환경 시설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축실적에 따라 배출권 할당 우대
- 설비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출실적 대신 생산량·설비효율 수준에 따라 할당하는 업종 확대*

* (현재) 정유·항공시멘트 → (변경) 설비효율 등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업종 중심 확대

③ (안전·SOC 투자확대) 내진보강, 민간자본·연기금 등 활용 촉진

① (안전투자) 학교시설, 공항·철도 등 주요 SOC 내진보강을 확대* 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

* (학교) '16년 673 → '17년 2,500억원 (주요 SOC) '16년 551 → '17년 1,744억원 (원전) 규모7.0 내진보강 조기완료, 중장기적으로 7.5 달성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

② (민자사업 활성화) 복합·연계시설(예 : 유치원-양로시설, 연구소-벤처사무소 연계시설 등) 등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 마련(9월)

-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우선검토 대상 사업유형을 확대(16→27개*)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심의를 6개월내 완료

* (현행) 학교·병영시설·하수관거 등 16개 → (변경) 복지·환경시설 등 11개 추가

③ (연기금 등 활용) KIIP(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)를 통해 연기금·민간자본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 지속 발굴(서울-광명 고속도로 등 25조원)

-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대체투자 정보시스템 구축, 기준 수익률(Benchmark) 적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(6월)
- 공공·민간 합동으로 부산·광양 등 6개 항만 재개발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'17년중 3.7조원 투자(공공 1.4조원, 민간 2.3조원)

④ (질적수준 제고) SOC에 대한 종합 평가지수를 개발*·활용하여 SOC 질적향상 목표 수립

* 연구용역(1월~)을 거쳐 안전성·친환경성·투자효율성 등 평가지표 개발

◇ 소비심리 조기 회복 및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 강화

① (소비심리 회복) 소비 인센티브 강화 및 관광·여가 활성화

① (인센티브 강화)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%(승용차), 취득세 50%(승합·화물차) 한시 감면

* 승용차 개소세(교육세·부가세 포함) 감면 : '16.12.5~'17.6.30일, 143만원 한도
승합·화물차 취득세 감면 : '17.1.1~'17.6.30일, 100만원 한도

-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전통시장 및 공연·외식 등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 추진

② (관광·여가 활성화)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('17년 시범시행) 등 해외관광객 유치노력 강화

- 겨울여행주간 신설('17.1.14~30일), 광역관광루트 개발 등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 수립(3월)으로 국내관광기반 확충

-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*하고,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 수립('17.下)

* 인천남항(22만톤급), 속초항(3만톤급), 제주 강정항(15만톤급 2선석) 등

-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·카트 선택제 확산* 등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골프장 규제개선 방안 마련** (6월)

* 캐디·카트 선택제 도입 계획을 체육진흥기금 용자 지원 요건에 반영

** (예) 회원제→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, 대중제 골프장 마케팅 가이드라인 마련 등

② (청탁금지법 조기정착)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·영향 점검,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 마련(1월)

○ 설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축수산물 및 문화접대비 인정상품권 기업 단체구매 유도

○ 음식점업, 농축수산물 유통업,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역별·업종별 정밀실태조사*를 거쳐 지원방안 강구

* 3차례 정밀실태조사 실시('16.12월 1차조사). 전통시장 축제 실시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, 특화상품 마케팅, 명절 전후 공영홈쇼핑 집중 방영 등 지원 추진

- ③ (구조적 대응)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령층 소비성향 제고를 위한 자산유동화 촉진
- 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 확대(2→3억원)*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
* 2억원까지는 1.5%, 2억원 초과분은 2.5% 저리 용자
- ② 배우자 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토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개선하여 주택연금 활성화

◇ 수출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, 해외진출 촉진

① (수출지원 강화) 무역금융 및 할당관세 지원 확대

- ① 수은·무보 등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신흥시장·서비스·인프라 등 유망부문 중심으로 **8조원 확대**(‘16년 221조원 → ‘17년 229조원)
- 해외온렌딩 등 중소·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(24→26조원)하고, 이란·인도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 확대(신규 한도 10억불 설정)
- ②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 원자재, 신산업 설비·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(‘16년 30개→‘17년 38개 품목*)
- * 나프타제조용 원유, 이차전지용 연신기·압출기, 연료전지용 전극막접합체 등
- ③ 중기청 수출지원센터(14개) 등 유관기관간 **one-roof** 지원 기능 강화, 중소·중견기업 수출역량별 마케팅·R&D 등 맞춤형 지원*
- *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신시장 진출 전과정 지원,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&D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

② (보호무역주의 대응) 균형있는 對美 교역구조 형성 노력을 강화하고 수입규제 대응 및 FTA 시장 확대 추진

- ① (교역구조 개선) 경제성, 국내수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* 등 對美 원자재 교역 확대 검토
- * ‘17년부터 연간 280만톤 규모 셰일가스 도입 등
-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출희망기업에 입찰정보 조기 제공 및 컨설팅 확대
 - 항공기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*하고 실물펀드 자산 운용 규제 합리화** (5월)
- * 항공기 구매자금 직접대출, 타은행 대출시 채무보증, 리스운용에 대한 보증지원 등
- ** 특별자산(항공기, 선박 등) 투자 펀드의 차입 허용 및 SPC 지분 100% 보유 허용 등

② (수입규제 대응)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해 G20·APEC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는 WTO 제소 등 대응

-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피소기업 실태조사(1월)를 통해 대응사례,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

③ (FTA시장 확대) RCEP·TISA(복수국간 서비스협정) 등 양·다자 무역협정*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후속 활용방안 마련

* (진행중) RCEP, TISA, 한중일 에콰도르, 이스라엘 / (추가협상) 인도, 아세안 한중서비스투자 (정식서명 추진) 한중미 FTA / (기반조성) MERCOSUR, 멕시코,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

- 한-영 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없이 한-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되도록 한-영 FTA 추진 등 집중 논의

③ (서비스수출 확대) 유망 지역 시장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하여 서비스 분야별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(3월)

- 서비스업 특화 수출금융 상품을 개발, 보건·의료·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야 수출금융 지원 확대('16년 3.5 → '17년 4.0조원)

④ (전략적 해외진출)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 22조원 확대

① 유망신흥국 수주·진출지원을 위해 EDCF(1.6→1.7조원), 수출금융(5.9→7.5조원) 확대, 신흥국 경협증진자금(0.5조원, 개발금융) 신규 운용

- EDCF·KSP·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등을 통한 개발협력사업을 설계부터 본사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주가능성 제고
-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DB를 구축하여 사업발주·수주현황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EDCF 발전방안 마련(9월)

②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조성(1천억원 목표), 종합정보시스템 및 사업발굴·민간지원기구 구축

- 해양플랜트 노후화에 따른 수리·해체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로드맵 마련(5월), 지원센터 설치(9월) 등 기반 구축

③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구축·활용(필요시 대외직명부여 등 체계적 지원)

* (예) 명예영사 활용, 고위급 면담, 해외발주처 고위인사 초청,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

(3) 리스크 관리 강화

◇ 대외부문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노력 강화

① (대외건전성 관리) 외환시장·외채·자금유출입 등 대외건전성 관련 심층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 보완·정비

* 외환시장 등 심층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「외환·국제금융 실무대책반」 운영

① 외화 LCR*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(1월)하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·선물환포지션 제도 탄력 운영

* Liquidity Coverage Ratio(高유동 외화자산/향후 1개월간 외화순유출)

② 신평사, 외신, 주요투자자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IR을 강화*

* '17.1월 뉴욕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

② (금융시장 안정 강화)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시장 불안,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

①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천억원 인수 (산은)하고, 시장변동성 심화시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(10조원+a)

- 채권전문딜러 역할강화,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일몰연장('16.末 →'17.末) 등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('16.7월)을 차질없이 이행

②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 금리를 인하(2.47→2.3%)하고 금융지원 6.8조원 확대*

* 신·기보 보증공급 적극 확대(최대 3조원) 등

③ 금리상승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증권·보험사 등 리스크 관리 강화*

* (증권사) 채권 등 보유자산 위험관리, 부동산 PF 우발채무 및 ELS 쏠림현상 관리 강화 등
(보험사) 자본비율 하락에 대비하여 필요시 자본확충계획 마련
(MMF·채권형펀드) 펀드 환매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관리 강화

◇ 취약업종 ·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

1 (산업 구조조정) 조선·해운·철강·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*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

* (조선해운) 해운조선 상생협의회를 통해 선박발주수주 정보 공유, 신조발주 인센티브 마련
- 조선 : '17년 발주예정 군함 상반기 조기발주, 설계전문회사 1/4분기 설립완료
- 해운 : 한국선박회사, 글로벌 해양펀드 등 1/4분기 자금지원 실행, 신조발주 지원
(철강·유화) 고부가첨단제품에 대한 R&D 투자 본격화

- ① 조선·해운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,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 원점 재검토
- ②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, 업황 및 경쟁력 점검(4월)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추진

2 (현안기업 구조조정) 기업 · 채권단 중심으로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속도감있게 추진

- ①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율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성공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
- ②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(C·D등급)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(분기별)하여 신속한 정상화 또는 정리 추진
- ③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“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” 규모를 확대(1천→5천억원)하고 대기업까지 지원

3 (추진체계 정비)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

- ①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**Pre-Packaged Plan** 제도 활성화*

* '17.1월부터 정부, 법원, 금융권, 민간전문가 등과 T/F 구성·운영

- ② 기업재무안정 **PEF***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 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('17.下)

*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뿐만 아니라 부실채권·부동산 등에도 투자 가능('14~'16년간 한시 도입 후 '16.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시화)

- ③ 회생법원 신설(3월)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 검토

◇ 가계부채 연착륙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경감

- ① (가계부채 연착륙)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소업권(1월 잔금대출, 3월 상호금융권)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
 - ① 차주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 도입·정착('16.12월~)을 통해 주담대 이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관리 강화
 - ② 금융기관 건전성과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,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
- ② (질적 구조개선)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('17년 42.5→45%), 분할상환(50→55%) 목표비율 상향조정 등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
 -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·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 상향('17년 15→20%)
- ③ (서민금융지원) 금리상승 등에 따른 한계차주 등 서민부담 경감
 - ① **4대 서민정책자금* 1.3조원**('16년 5.7 → '17년 7조원), 사이트돌 증금리 대출 1조원(1→2조원) 등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총 2.3조원 확대
 - * 미소금융, 햇살론, 새희망홀씨, 바꿔드림론
 - 디딤돌대출·보증자리론·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(41→44조원)하고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 - * (디딤돌대출) 주택가격 6→5억원, (보증자리론) 소득요건 연 7천만원 신설, 주택가격 9→6억원, 대출한도 5→3억원, (적격대출) 순수고정형 상품 확대 등
 - ② 프리워크아웃·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, 채무상환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* 등 연체자의 재기 지원
 - * 국민행복기금·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가 약정금액의 75%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후, 사고·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채무 면제 등
 -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**Fast-Track**을 확대하여 공적 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(최장9→최소3개월), 소요비용 절감(약 200만원)
 - ③ 불법·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규율을 강화*하고,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**을 마련(6월)하여 채무자 보호 강화
 - *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 금지,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등
 - ** 매입기관의 과거 불법추심기록 확인,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 등

◇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

① (시장안정 시스템 강화)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,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·맞춤형 대응체계 구축

* '17년 상반기중 지정요건, 대응수단 등 구체화방안 마련, 법령개정 등 추진

- ①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·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
- ② 매매거래 위축 우려 지역은 건설·청약 규제 및 각종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
- ③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 마련(17.下)

② (주택시장 안정적 관리) 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·전세임대 확대 등 적극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

- ① 공공 매입·전세임대(4만호)를 5만호까지 확대
- ②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, 매입임대리츠 설립(주택 매입후 임대주택 공급)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시장안전장치 확보
- ③ 주택가격 하락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애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반환보증 활성화

* 보증료율(현재 0.15%) 인하 검토, 전세금 상한 확대(HUG 최대 4→5억원) 등

③ (실수요자 중심 시장 정착) 국토부, 지자체, 국세청 등 상시 점검팀을 운영하여 투기·불법행위 차단

- 국토부-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재개발·재건축 이주수요 집중 등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

* 국토부-지자체간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실효성있는 이주관리 등 실시

2 민생 안정

【일자리 창출】

- (민간·공공) 일자리 예산('16년 15.8 → '17년 17.1조원)을 조기 집행하고 창업 활성화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고용여건 보완
- (취약계층)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를 확대(1인당 5→7백만원)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 확대
 -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
- (구조조정) 특별연장급여 지급 검토(60일 이내),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완화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확대

【소득기반 확충】

- (저소득층 지원)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으로 임금·일자리 구축 차단
- (복지제도 재점검) 1~2인가구 생계급여 확대방안 마련 및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간 연계 강화 검토
- (영세 자영업자 지원) '17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(13개) 보호·지원방안 강구
 - 상권 내몰림(젠트리피케이션)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도입,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
- (생계비 경감) 긴급복지사업 생계비 지원단가를 인상(4인가구 113.1→115.7만원)하고 주거·교육·의료·통신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

【부문간 상생】

- (정규직-비정규직) 중장기 비정규직 목표를 수립하고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(1인당 200→500만원)
- (대-중소기업) 일감몰아주기 근절, 유통·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

(1) 일자리 창출

◇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·연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

① (민간 일자리)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
- ① 대폭 확대된 일자리 예산*을 조기 집행하고,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·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 전환

* 일자리 예산 : ('16) 15.8조원 → ('17) 17.1조원

② 제조업·건설업 등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*

* (제조업) 해양플랜트(100여명)·산업용 섬유소재(30여명) 등 전문인력 양성, IoT가전·로봇·무인기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추가 창출

* (건설업) 건설업 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('17.上), 중소건설업 해외진출시 청년 훈련비 추가 지원(연간 1,140만원/인 → 청년의 경우 최대 1,500만원)

③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·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분위기 확산 유도

-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('17년 500팀, 팀당 최대 1억원 지원) 하여 교육, 사업화, 자금, 보육 등 창업 쏠단계를 연계 지원

-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확대*

* (현행) 5년간 50% 감면 → (변경) 처음 3년 75%, 이후 2년 50%

- 창업경진대회(도전 K-스타트업) 내실화* 및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제작 검토

* 엑셀러레이팅 및 전문가 멘토링 확대,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, 후속지원 강화 등

- 공공기관 창업샘터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유희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및 실험설비 대여 등 지원

*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6개기관 참여중, 정부 3.0 공공기관 평가시 가점부여 등

② (공공부문 일자리)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·지자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 6만명* 이상 신규채용

* 국가·지자체 공무원 4만명, 공공기관 2만명

-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을 연장('16.末 → '18.末)하고,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
◇ 청년·여성 등 고용애로계층 취업 지원 강화

① (청년)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·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채용연계·장기근속 유도 등 단계적 지원 강화

① (조기집행) 청년일자리 예산(2.6조원)을 1/4분기 집중 집행

② (인센티브)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(1인당 500→700만원, 대기업은 200→300만원)

③ (채용연계)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(15→16만명)하고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취업활동 소요실비(숙박비·교통비·사진비 등) 지원 확대

* 청년희망재단(6개월간 60만원 한도) : 중위소득 80%이하 → 중위소득 100% 이하, 지자체별 협약을 통해 청년희망재단 외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 확대

- 고용디딤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참여실적 반영, 유망서비스업 등 채용행사를 통한 취업연계 확대(0.5→1만명)

④ (해외취업) 일본(IT, 종합상사), 베트남·인니(한국 진출기업), 싱가포르(호텔) 등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·업종별 맞춤형 지원

* (일본) 어학·면접 취업캠프, 일본 채용시기(봄·여름)에 맞춘 취업지원 제공 등
(베트남·인니) 현지 한국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취업 및 창업 지원
(싱가포르) 호텔 물류 등 K-Move 스쿨 과정 발굴 및 초급경력자 대상 알선서비스 강화
(크루즈산업) 크루즈 승무원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및 해외 대형 선사 취업 알선

⑤ (장기근속 유도) 청년내일채움공제* 가입대상을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,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(1→5만명)

* 2년 근속시 1,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(정부 600 + 기업 300 + 개인 300만원)

-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(2년) 후 내일채움공제*로 연계 되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근거 마련 후 세제지원 방안 강구

* 5년 근속시 최소 2,000만원 이상 자산형성 지원 (기업·개인 2:1부담)

② (여성)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

①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中企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를 70% 감면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中企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(50→100%)

- '여성새로일하기센터'를 5개소 확충(150→155개)하고,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·창업지원 강화

② '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% (누적) 이상 활용토록 하고 해당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충원

③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실업안전망 확대를 위해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, 부분 실업급여 등의 도입방안 마련(17.下)

* 고용부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

◇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흡수

① (특별고용지원업종) 고용조정 상황,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특별연장급여 지급(60일 이내) 검토

○ 업황 회복시까지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실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'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' 지원요건 완화*(3월)

* 최소 실시기간 단축(90일→30일), 유급휴업·훈련 선행요건 완화

② (재취업·소득지원)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대응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*, 소득보전방안 검토**

*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: (현행) 월 100만원 → (변경) 월 200만원, 연1천만원

** 연구용역(2월~)을 거쳐 도입 필요성 및 중장기 도입방안 등 검토

○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확대*, 주말과정 개설 확대, 직무관련 어학·전문자격 과정 개설 허용

*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: ('16) 31만명, 847억원 → ('17) 39만명, 1,064억원

○ 직업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강좌 개설 허용, 수강료 상한 폐지, 훈련수준별 지원단가 할증 등 시행

[2] 소득기반 확충

◇ **공정 일터 조성, 불법고용 방지 등 저소득층 임금소득 보완**

① **(공정일터 조성) 기초 고용질서 확립***을 위해 **근로감독관을 단계적 확충****하고 **상반기 집중 홍보·계도 후 하반기 집중 단속**

* 근로계약서 작성, 최저임금 준수, 임금체불 방지, 4대보험 가입 등

** 국제기준, 업무량·성과분석,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 추진

① **(최저임금 보장 강화) '17년 최저임금을 7.3% 인상**(시간당 6,030→6,470원)하고 **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 즉시 부과 추진**

- **청년 취업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**하고 **편의점·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공개**

- **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임금산정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한 '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' 이행 강화**

* 용역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임금 지급시 입찰참가제한 강화(최대 1개월→3개월), 지침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

② **(임금체불 방지)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**하고 **임금체불주 명단공표의 실효성 제고***

* 자치단체 취업센터 등 정보제공, 민간 포털과 연계한 체불사업주 상시 검색 서비스 등

- **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용자 확대**(최대 5→7천만원), **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**(現 300만원) **인상*** 검토

* 한도상향 적정성 및 기금건전성 영향 연구용역(~1월) 결과를 토대로 상한액 검토

② **(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) 저소득 근로자 임금·일자리 구축 차단**

① **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역량을 강화***하고 **관계부처 합동 집중 단속 실시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,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****

* 광역단속팀 확대(수도권·영남권 2개 → 호남권·중부권 추가하여 4개)

** 고발대상 확대(불법고용 외국인 7→5명 이상, 불법고용기간 1년→6개월 이상), 범칙금 상향(위반 기간, 고용 인원 등에 따라 현행 기준대비 100만원 수준 상향)

- ②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과*(6월)하고 과도한 유입·사용 억제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

* 고용보험료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계정) 부과, 도입위탁수수료(현행 4만원) 현실화

- ③ 고용시장·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,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(6월)

◇ 복지제도를 재점검하여 저소득층 1~2인 가구, 노인가구 등 지원 확대

- ① (기초생보)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.2%(월127→134만원, 4인가구), 주거급여 2.5% 인상(월11.3→11.6만원)
-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저소득 1~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(7월)
- ② (근로장려금)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장려금 지급액을 10% 수준 상향(단독가구 70→77만원, 홑벌이 170→185만원 등)
- ③ (노인가구 지원)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인상(월20→22만원) 하고 저소득층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개편*(3월)
- * 공익적 성격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시 기초연금수급자 가점 부여 등
- ④ (사회보험) 고용보험·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 검토('17.下)
- * 연구용역(3월~)을 거쳐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편방안 강구
-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기준 추가 등 검토(9월)
 - *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해야 하나 실태파악이 어려워 가입회피 등 악용 →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일정소득 이상자 의무가입으로 전환
- ⑤ (연계강화)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(기초생보·사회보험·최저임금·근로장려세제 등) 효과성 평가 및 연계 강화방안 검토
- * 기재부·고용부·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공동연구 실시('17.上)

◇ **골목상권 보호, 상권내몰림 방지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**

① **(골목상권 보호)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**

① '17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(13개) 보호·지원방안 강구

- 업종별 시장분석 및 통상마찰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,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등 근본대책 마련(6월)
- 생계형 업종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시 적극적 사업조정 실시

② 대형업체-영세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점포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* 검토

* (현행) 종합소매업 → (변경) 주변상권과의 경합도 등 감안하여 요식업 등 추가

③ 대형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리비 운영규정 마련, 위반시 과태료 부과

② **(전통시장 활성화) 전통시장내 임차상인 보호 및 활력 제고**

①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통시장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

② 임대료 동결 상생협력을 맺은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, 현대화 사업 우선 선정 지원

③ 전통시장 입지·역량을 감안하여 골목형, 문화관광형, 글로벌 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나눠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

③ **(협동조합 활성화)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, 가맹본부-가맹점간 불공정한 계약 해소 유도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**

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가맹본부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, 마케팅,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 지원

②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 예비창업교육,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(0.7→1억원)

④ (상권내몰림 방지) 상인·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추진

① 자율상권조합 주도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(5→10년) 등 특례 합의를 환경·영업시설 정비 지원

-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발전을 위한 '상권내몰림(젠트리피케이션) 방지 가이드라인' 마련(8월)

② 상권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프로그램을 도입(8월)하여 신규영업장 물색·컨설팅·재창업 등 종합 지원

⑤ (안전망 확충)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생업 안전망 확충

① 자영업자 소득과악시스템을 마련*한 후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추진

* 자영업자 소득판별시스템 및 사업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(2월~)

②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허용 확대* 검토(7월)

* 현재 운송업, 건설기계업, 택배업, 대리운전업 등은 산재보험 가입 가능

◇ 쌀수급 안정, 양식 보험제도 개편 등을 통해 농어촌 소득안정

① (농가)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'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('15.12월)'의 보완책 마련(1월)

①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이외 작물 재배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,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소비확대 추진

② 사료용 쌀 공급확대(47만톤) 등 정부양곡 재고감축,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

* 직불제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, '17년 별도 개편안 마련

② (어가)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(24→27개*), 고수온 특약 등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로 자연재해에 따른 소득불안 최소화

- 수산물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에 민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, 지속적 경영 유도를 위해 어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추진

◇ 핵심 생계비 경감, 서민물가 안정으로 가계 실질소득 확충

① (생계비 경감) 주거비·의료비·교육비·통신비 등 부담 완화

① (주거비)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2배 확충(2.5→4.6만호)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(3.8→4.8만호)

② (의료비)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* 연장(~'17년) 및 건보 재정 등을 통한 제도화방안 마련(6월), 난임시술 건보 적용

* 저소득층에게 중증질환 본인부담금, 비급여 진료비 지원(최대 2천만원 한도)

③ (교육비)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(셋째아이 이상)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(1~3학년 → 쑤학년)

- 학업성적 우수자(3분위 이하)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원금의 30% 및 이자 전액 면제*

* 대학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민간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

- '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'를 전면 실시(1월)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, 과대·거짓광고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강화

④ (통신비) 휴대폰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(9.30일) 및 할인율 조정 등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 마련(10월)

*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, 위약금 관련 안내·고지 강화 등

- 어르신·장애인·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요금제 확대,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*

*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(~'19.9) 등

⑤ (식료품비)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면서 계란값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·항공운송비(50%) 지원 등 신선란·난가공품 수입 촉진

- AI 피해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(약 1,720억원), 생계안정자금(약 7억원), 소득안정자금(이동제한 해제 후 산정) 등 신속히 지원
- 농가책임 방역체계 구축, 예찰·초동대응 강화, 동물약품 효능 평가 강화 등 근본적인 방역개선 종합대책 마련(4월)

⑥ (긴급복지) 긴급복지사업의 생계비 등 지원 단가*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, 양곡구입 등 생계비 지원 확대**

* (생계비) 113.1→115.7만원, 4인가구 (연료비) 9.3→9.5만원 (주거비) 62.2→63.6만원 등

** ①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(만0→1세), ②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(母의 사망·질병→조손가구 등), ③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양곡구입 자부담율 인하(50→10%) 등

② (공공요금) 정부·공공 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·인하

③ (유통구조 개선) 농수산물 도매시장, 주류시장 등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경쟁 촉진, 가격인하 유도

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전속관계 해소를 위한 정산조직 설립을 확대(가락시장 등)하여 도매시장법인간 경쟁 촉진

*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담보를 개별법인 대신 통합정산조직을 통해 제공하여 복수법인과 거래시 추가부담 해소,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(9월)

- 대량수요자(대형유통업체, 식자재업체 등)가 요청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·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(6월)

② 주류시장 규제를 재점검하여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규제 정비 등 경쟁 촉진방안* 마련(5월)

* 관계부처 TF 및 업계 간담회를 거쳐 주정면허 시설기준 완화, 주류 첨가물 사용제한 완화(식품위생법 기준 도입) 등 세부과제 발굴

(3) 부문간 상생

◇ 정규직-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 시정,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

① (비정규직 처우개선)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연초 확정*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 마련('17.下)

* (예)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, 정규-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,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,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

○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2배 이상 확대*

*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200만원→500만원

○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형태공시제도 실효성 제고

* ① 법인단위 → 개별사업장 단위로 세부공시, ② 사내하도급에 대해 위탁 업무내용 추가 공시('17년 5천명, '18년 3천명, '19년 1천명 이상 사업장 적용)

○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노사정委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기준* 보완 및 '차별판단 매뉴얼' 개정

*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 판단기준 등

② (하청 근로자 보호) 원청기업의 하청기업 근로조건 개선노력 유도

①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 인건비, 안전투자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지원 확대

* 출연목적 : (현행) 연구, 인력개발, 생산성 향상 등 지원으로 한정 → (변경) 제한 폐지
세액공제율 : (현행) 7% → (변경) 10%

② 하청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 후 산업재해관리방안 마련(6월)

- 하도급 산재발생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 요율 산정시 하도급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

◇ **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으로 내-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**

① (공정거래질서 확립)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관행 개선

① (일감 몰아주기) 규제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 중심 실태점검(상하반기 2차례) 실시, 위반 혐의 기업은 현장조사 실시

-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지속 점검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현황을 분석·공개(8월)하여 자발적인 개선노력 유도

② (유통) 백화점·홈쇼핑 등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정기조사·발표,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* 제정(1월)

* 온라인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광고, 할인, 반품, 정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

③ (가맹)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입 강제 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항목 추가*, 피해빈발 업종 지속 점검

* 필수품목 구입처와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 세부항목 추가(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)

-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매장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도록 외식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·보급(1월)

④ (하도급)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시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* 강화

*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에 범위반행위 신고, 분쟁조정 신청, 서면실태 조사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협조도 추가('17.上, 하도급법개정안 국회 제출)

② (기업지배구조 개선) 정보공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

① 국내기업의 해외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공시,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시 해외계열사의 주주·출자현황 공개

* 현재는 모든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합계액만을 공시, 국내 계열사가 해외계열사의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만 해외계열사 주주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

② 연기금·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이행 원칙을 담은 '한국 스투어드십 코드' 제정·시행('16.12월~)

③ 분식회계 방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등 회계제도 개혁방안 마련·시행(1월~)

3 구조개혁과 미래대비

【4차 산업혁명 대응】

- (추진체계) 민관합동 「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」를 신설하여 기술·산업 뿐 아니라 경제·사회 전반의 혁신 추진
- (데이터·기술) 국가 중점데이터 추가선정·개방(36→74개),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&D 지원 확대
- (산업생태계) 규제 개혁, 지원 강화 등 신산업 투자 촉진
 - 규제프리존 도입, O2O 규제 합리화 등 규제장벽 해소
 - 「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(20조원)」, ‘글로벌스타벤처’ 100개사 육성 등 신산업 중심 정부 지원제도 개편

【4대 구조개혁】

- (교육)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정 국가교육과정 시행, 4차 산업혁명 핵심 경쟁력인 S/W 교육 필수화
- (노동)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, 미래 유망분야 NCS 개발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문간 일자리 이동 가속화 대응
- (금융)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활성화, 기술금융 확대 및 클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로 모험자본 육성
- (공공) 공공기관 정상화, 재정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촉진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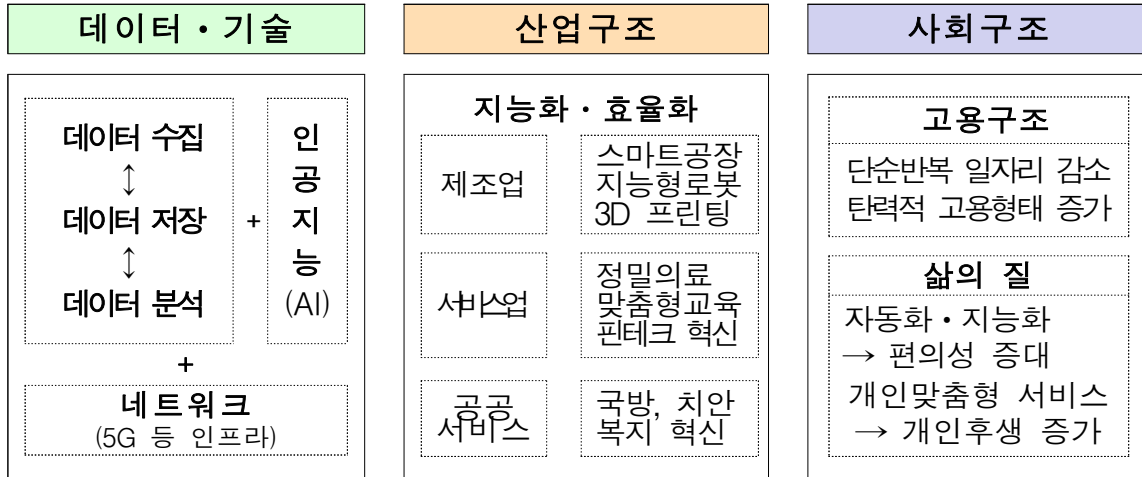
【저출산·고령화 대응】

- (출산율 제고) 심층평가를 거쳐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효율화, 결혼·출산 인센티브를 세자녀→두자녀 가구 중심 재설계 검토
 - 혼인세액공제 도입(1쌍당 최대 100만원),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(0.5→0.7%p) 등 만혼·비혼 개선 노력 강화
- (고령사회 준비) 노인연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노후소득기반 강화
- (우수 외국인력 활용) 중장기 외국인·이민정책 방향 수립(1월)

[참고] 4차 산업혁명의 의의 및 정책방향

□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(AI), 데이터기술*이 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·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

* 사물인터넷(IoT), 클라우드(Cloud), 빅데이터(Big Data), 모바일(Mobile)



□ 핵심기술, 시장기반 조성, 인력 확보와 교육·노동개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경제·사회시스템 구축

구분	주요내용
데이터 인프라 구축	▶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데이터 유통 ·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
핵심기술 개발 (R&D)	▶ 지능형 제품,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
산업생태계 조성	▶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개선 ▶ 신산업 · 신기술 분야 시장 조성 위한 정부지원 체계 개편
미래인재 양성	▶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편성 ▶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
노동시장 효율화	▶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▶ 부문간 일자리 이동에 대비한 교육훈련시스템 정비

민관합동 「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」 설치 · 운영

☞ 4차 산업혁명의 기대효과 (맥킨지, '16년),

- ① '30년까지 매출·후생증가 등 최대 460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
- ② SW엔지니어, 데이터 과학자 등 최대 80만개의 일자리 창출

(1) 4차 산업혁명 대응

◇ **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구축, 경제·사회 전반의 혁신 촉진**

1] (추진체계)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「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」 신설

* 경제부총리(주재), 관계부처 장관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
○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경제·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「4차 산업혁명 대책」 마련(~4월)

- 핵심기술 개발,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,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

2] (거점 조성) 판교 창조경제밸리,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

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

- 창업보육센터, ICT-문화융합센터, 정보보호·드론센터 등 지원 기관 집적, 저렴한 임대료로 유망 벤처·창업기업 집중 유치

②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·정보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·보완*

* 인천(전담기관 : 한진) - KT 추가, 울산(전담기관 : 현대중) - UNIST 추가 등

◇ **데이터·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**

1] (데이터 산업 육성)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의 수집·저장과 분석·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

① (생산·개방)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추가 선정(36→74개)하고 공공데이터 포털(data.go.kr)을 통해 민간 개방

② (유통·활용)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비식별조치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지도 작성

② **(핵심기술 개발)** 인공지능·IoT·클라우드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**R&D 로드맵 수립(4월)** 및 지원 확대*

* 4차 산업혁명 R&D 예산 : ('16) 3,147 → ('17) 4,381억원(39.2% 증가)

- 뇌과학·산업수학 등 기초과학 및 핵심·응용기술에 대한 전략적 **R&D**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계적으로 극복

* (예) 언어·시각·감성·공간 등 인지기술 분야는 '23년까지 글로벌 수준 확보

-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연계 사이버보안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선도기술 확보*

* 지능형 사이버 자가방어 기술 등 10여개 과제(약 200억원) 추진

◇ **핵심규제 개선 · 시장기반 조성 등 산업생태계 혁신**

① **(핵심규제 개선)** 민간의 혁신 노력을 저해하는 규제장벽 제거

- ① 규제프리존 도입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대기 투자수요를 구체화

- ②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적합성 인증 제도 개선*,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인증개발 추진

* 소관부처가 불명확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정부 대표 접수기능 부여 등 ('17.上,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)

- ③ O2O규제 합리화로 승차공유·공간공유 등 신서비스 창출 지원

- 승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심야 콜버스 운영 지역 확대(現 서울시 한정), 전세버스 활용 대리기사 이동 편의 제고*

* 대리기사가 모바일앱 등을 통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 운영

-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유상대여 허용*

* 입주자 동의 비율, 주차대수 및 위치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 자율결정

② (시장기반 조성)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

① (금융)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 운영(산은)

* 시설·운영자금 대출,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금융 제공

② (조달)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*을 통해 초기수요를 창출하여 신제품개발을 적극 유도하고, 우수조달제품 등 공공판로 확대

* 먼저 조달약정 후에 제품을 개발하는 공공혁신조달사업(드론 6개 사업) 추진중

③ (R&D) 도전적·독창적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형*, 자유공모형 R&D 등 혁신적인 R&D 기획·관리방식 도입·확산

*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개발자를 연구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(美 DARPA 방식)

- 정부 R&D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인공지능 S/W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등의 형태로 개방·공유 추진

④ (창업·벤처 지원)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

- 유망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*을 통해 '20년까지 '글로벌 스타벤처' 100개사 육성 추진

* TIPS 창업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, 글로벌 멘토링, R&D 등 패키지 지원

- 연구소기업의 창업·사업화 지원 및 O2O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업종*(금융보험업·부동산업 등) 정비

* 실태조사(3월), 고시 개정(6월) 및 법령 개정을 통해 투자제한 업종 체계 개편('17년내)

③ (분야별 투자 활성화)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통한 유망 신산업 창출 촉진 및 기존산업 경쟁력 제고

① (드론) 실증사업* 확대,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(3개소, '17~), 가시거리 밖·야간비행 등이 가능토록 특별 운항허가제 도입

* 에너지시설 점검, 도서지역(고흥, 영월) 우편배달 등

② (자율주행차) 실험도시(k-city)를 조기 개방*하고(17.下) 핵심부품 기술개발 착수 및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

* 자율주행차 실험도시(경기도 화성)의 고속주행구간을 우선 구축·개방

③ (제조업·물류) 스마트공장 확대('16.11월말 2,760개 → '17년 4천개), 도시첨단물류단지 2개소(서울 서초·양천) 시범사업 착수

(2) 4대 구조개혁

◇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

- ① (교육과정 개편)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정 국가교육과정 시행(초등학교 '17년, 중·고교 '18년)
 - 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활성화,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자율성 확대
 - ②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인 S/W 교육을 필수화
 - S/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/W융합 교과 중점학교 및 S/W 중심대학 점진적 확대('16년 14 → '17년 20개)
 - 초등학교 S/W교육 의무화('18년)에 대비, S/W교육 연구·선도 학교*를 통해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S/W교사 채용 확대·연수 강화
 - * ('15년) 228개 → ('16년) 900개 → ('17년) 1,200개
- ② (대학 구조개혁) 4차 산업혁명, 학령인구 감소 등 대비를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* 수립(3월)
 - * 대학평가 방안 및 등급별 정원감축, 재정지원제한 방안 등 마련
 -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창업선도대학 확대(34→40개), 대학·산업체의 사회맞춤형학과 입학생 공동선발 등 취업연계 강화
 - *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학생수 : ('16실적)9.5천명 → ('17)1.2만명 → ('20)2.5만명

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

- ① (유연안정성 제고)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,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과제의 현장실천 확산
- ② (산업수요 변화 대응) 직종별 자동화에 의한 대체효과 및 유망 신산업·직업별 수요예측 등 '중장기 인력수급 전망' 실시
 - 산업트렌드에 부합하고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직종을 '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'에 포함하고, 폴리텍 중심으로 선도인력 양성*
 - 사물인터넷·AI 등 매년 미래 유망분야 신규 NCS를 개발하고, 국가기술훈련자격을 신설·변경하여 유망분야 인력양성 유도

◇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금융시장 혁신 추진

- ① (핀테크 활성화) 블록체인,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(1/4분기)
 -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안정화*를 위한 현장지원반 한시 운영(1월), 창의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은행법 등 개정 노력 지속
 - *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본인가('16.12.14일) → '17.1~2월 본격 영업 개시예정
- ② (자본시장 활성화)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('16년 20.5 → '17년 34조원) 하고, 클라우드펀딩 규제 완화* 등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촉진
 - * 스타트업 전용 플랫폼(KSM) 거래시 지분 전매제한 적용 배제, SNS광고 허용 등
 - 공식 장외시장 육성을 위해 K-OTC 증권거래세 인하(0.5→0.3%) 및 주식발행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*하고 기관투자자 전용시장 개설
 - * K-OTC 주식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 확대
- ③ (금융서비스 개선)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(1월 국회제출), 법제정 전 추진 가능과제*는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(1월)
 - *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자료 접근성 강화, 금융취약계층 단계별 보호절차 마련 등
 -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 개선* 등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*
 - * (현행) 가해자·피해자 고려 없이 할증 적용 → (변경) 가해자·피해자 할증 차등화
- ④ (금융업 경쟁력 제고) 자산관리 역할 제고 등 신탁업 발전방안(6월), 위험관리·요율산출 역량 강화 등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('17.下)

◇ 공공기관 정상화, 재정개혁을 지속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

- ① (공공서비스 혁신) 정책금융, 산업진흥, 보건·의료 3대분야 기능 조정방안(유사·중복기능, 비핵심·민간경합부문 조정 등) 차질없이 마련
 -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(정부3.0 평가시 가점부여)하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효율성 제고
- ② (재정개혁)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지속
 - 연기금투자폴 통합운용 강화 등 사업성기금 여유자금(약 40조원) 운용을 효율화하여 해외·대체투자 등 확대
 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상반기 중 개통(1월부터 순차개통) 하고 분야별로 산재된 바우처카드를 '국민행복카드'로 통합

(3) 저출산·고령화 대응

◇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든 개선, 양육부담 경감 등 단계별 지원 확대

- 1 (저출산 정책 재점검) 저출산 정책 점검·평가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혼·출산·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효과성 제고
 - ①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성과 및 적절성·효과성 등을 심층 평가하여 효율적 사업추진방향 강구(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반영 추진)
 - ② 결혼·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하여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검토(17.下)
- 2 (만혼·비혼 개선) 결혼에 대한 재정·세제 인센티브 확대
 - ① 서민·중산층 근로자 등(총급여 7천만원 이하)에 대해 혼인세액 공제 신설(1인당 50만원,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)
 - ②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(0.5→0.7%p)
- 3 (일·가정 양립)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, 모성보호제도 이행 강화 등을 통해 육아부담 경감 및 일·가정 양립 문화 정착
 -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어린이집 평가대상 확대,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
 - * ①직장어린이집 지원 : 최대 6억원 한도 80% 지원 → 8억원 한도 90% 지원
 - ②평가대상 확대 : 어린이집이 신청할 경우 선택적 평가 → 모든 어린이집 평가
 - ③공동브랜드 : 창업기업지원자금·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자금 지원 등
 - ② 모성보호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실적 등을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반영*,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
 - *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에 모성보호제도 이행 관련 가감점 항목 신설
 -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출산·육아휴직 근로자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 제공
 - * 고용복지+센터 중심으로 대체인력 구인·구직·알선 및 지원금 신청을 패키지 지원
 - 출산휴가 급여를 인상(월135→150만원)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 발굴·홍보

◇ 노인기준 재정립,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 가속화

- ① (노인기준 재정립) 노인연령기준, 정년·연금수급연령 조정,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,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
* 연구용역·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 구축, 합의 도출 추진
- ② (다층적 연금체계 구축)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노사중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자 수급권 강화
 - 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고, 연금청약 철회권 도입 등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
- ③ (실버산업 육성) 건강관리·요양·장사(葬事)서비스, 재활로봇산업,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수립(17.上)
* 요양기관 진입요건·평가체계 개선, 노인전용 주거단지 및 자연장 활성화 등

◇ 우수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

- ① (대응전략) 저출산·고령화,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·이민정책 방향 수립(1월)
 - ① 중장기 인력수급전망·노동시장테스트·비자체계 개선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·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
 - ② 이민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입·통합정책, 이민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마련
- ② (대응체계) 외국인 관련 위원회간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노력* 지속, 다문화이주민*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**
* 외국인정책위원회,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운영(4월) 등
**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출입국관리사무소,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,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공간적 통합 방식 등으로 복합서비스 제공(17년 12개소 시범운영)

V. 2017년 경제전망

- ① **(성장)** 세계경제 성장·교역 개선, 재정·투자확대 등 정책효과는 긍정적이나 내수가 둔화되며 연간 **2.6%** 성장 예상
 -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둔화,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**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**로 **3.8%** 성장 예상
- ② **(고용)** 성장둔화,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은 '16년보다 둔화된 **26만명** 예상
 - 고용률(15~64세)은 '16년보다 0.5%p 수준 개선된 **66.5%** 예상
- ③ **(물가)** 전기요금 인하는 물가 하락요인이나,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상방요인이 확대되며 연간 **1.6%** 상승 전망
- ④ **(경상수지)**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,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**820억불**로 축소 예상
 -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'**15~16년**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수출 **2.9%**, 수입 **7.2%** 증가 예상

2017년 경제전망

	2016년	2017년
▪ 경제성장률(%)	2.6	2.6
< 경상성장률(%) >	4.0	3.8
▪ 취업자증감(만명)	29	26
고용률(% , 15~64세)	66.0	66.5
▪ 소비자물가(%)	1.0	1.6
▪ 경상수지(억불)	940	820